

2021

통권 제29호

+ 입법정보

세종시의회의 소식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

SEJONG CITY COUNCIL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4P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충청권이 앞장서겠습니다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13P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제68회 임시회 개회사

SEJONG CITY COUNCIL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에서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동안 일상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말은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소중한 가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시 방역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생활 방역에 동참해주시고 계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25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코로나19 극복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종식의 최우선 과제인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백신 수급과 관리, 예방 접종 등
일련의 과정들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새봄을 맞아
따스한 봄별처럼 기분 좋은 소식들을

기대하고 계시리라 짐작됩니다.

세종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이자
시민과의 약속인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바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한 내실 있는
의회 발전 방향을 시민 여러분께 적기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일부터 많은 교육 주체들이
기다려왔던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앞으로 교육 공백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고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시작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중앙 정치권과 국회사무처 등 관계 기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조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방안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하면 더하기가 아닌 몇 곱절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닥친 위기이자
기회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의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또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3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 태 환**



개회사

-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 최고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 관계 공무원 여러분!

2 / 00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 의정 의제
- 국가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개회사

10 02

행정국장

시장

노동청

박정숙

김영민

김영민



CONTENTS

세종의회소식 통권 제29호

4	의정 포커스 충청권 4개 공동결의문 채택 제67회 임시회~제68회 임시회 성과
8	의원 인터뷰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12	의정뉴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 만장일치 가결
21	의원소식
28	5분 자유발언
38	시정 및 교육행정 · 긴급현안질문
41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48	연구모임
52	성명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 초당적 논의의 발판되길
53	주요안건 처리현황
55	입법정보 생활법령-솔로몬의 선택 법령 해석 사례 최근 시행 법령 주요 입법 동향 다른 자치단체 제개정 자치법규
72	의원 발언함
77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79	독자의 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의장, 자치분권 새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동 결의문 채택

충청권 시도회의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대응 등 협력키로

충청권 4개 광역시도회의 의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등 자치분권 새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3월 18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4개 시도의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 적극 힘을 모으겠다는 결의의 내용도 담겼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선언문 채택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제를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세종시 호수공원 내 국가균형발전 상징공원 등을 방문한 데 이어,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의장이 이날 공동선언문 채택 이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충청권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제67~68회 임시회 성과 도시 성장과 안착 위한 정책 발굴 ‘가속화’



세종시의회의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67회 임시회와 제68회 임시회 회기를 마쳤다. 두 차례 회기에서 각 소관 부서별 올해 업무추진 계획 논의와 시민 삶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등을 핵심적으로 다뤘다.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채택 역시 의회 역할과 위상 정립 차원에서 시의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원 발의 조례안 58건 입법활동 ‘활발’

입법 건수는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의정 활성화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세종시의회의는 두 차례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총 58건에 달하는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이 기간 동안 처리된 조례안 중 76.3%의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건과 안전,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

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신종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도시의 특성과 산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차별화된 조례 제정 사례도 눈길을 끈다.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도농복합도시의 강점을 살려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건의안과 결의안 통해 여론 조성 노력

세종시의회는 대내외적으로 사회 변화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발효를 앞두고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조직 구성권과 세출 예산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숙원 사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인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는 조속히 국회법을 개정해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는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목소리가 담겼다. 실제로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의 회와 시군자치구의회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지 결의안'과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역시 지난 제 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주목을 받았다.



4개 연구모임 본격 운영 본격화...전문성 강화

세종시의회는 급격한 도시 환경의 변화와 다분화된 시민 수요에 발맞춰 올 초부터 4개의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은 발족 이후 두 차례 이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연구모임에서는 세종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주요 과제 선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자전거



로 연구모임의 경우 연구모임 주관으로 시민점검단 출정식을 열었다. 향후 자전거 도로 개선과 관련된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연구모임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5개 분야의 순차적 주제 토론을 통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힘을 모으고 있다.

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 열어 대안 모색

세종시의 대표적인 주요 현안으로는 자족도시 및 행정수도 완성을 꼽을 수 있다. 세종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이유다.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산업과 연구 분야를 연계시킬 수 있는 대학캠퍼스 조성을 주문하고 4월 2일 대학 설립 및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도시 관리 비용과 직결되는 세종시의회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역시 4월 12일에 회의를 열고 8-1차 사업 준공 인수계획과 작년 10월에 실시한 합동 점검 조치 사항 등에 논의했다. 또한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회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집행부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시민들과 함께 그리는 자족도시의 미래

세종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세종시의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는 자족 도시 완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채성 의원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올해 핵심 의정 목표로 세우고 지역민들과 함께 자족도시를 향한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

Q. 올해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지

올해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철저한 방역 활동은 물론, 개인

위생 관리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생활방역 준수, 나아가 집단 면역 체계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이 이뤄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36만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Q.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 성과는?

특히 지난해에는 세종시민들의 바람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

대적 요구였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 127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시의회는 모든 역량과 의지를 다해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제로 세종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착공과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및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선정 등 세종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 등에 필요한 2020년 추경예산 및 2021년 본예산 심의 및 확정,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Q. 올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올해는 지난 2007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된 행복도시 개발사업의 완성에 첫 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1~4생활권의 경우 세심하게 관리하되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앞으로 조성될 5~6생활권의 경우 기존 생활권의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 모두가 꿈꾸는 2030년 행복도시 완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주요 현안 사항인 대전~세종 광역철도 등 주요 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국가산업단지와 스마트 시티 조성, 자율차 규제자유특구사업 등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교통·기업·환경·농축산·상하수도 등도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기반 시설 구축 차원에서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LH 개발부담금 부과 대책은?

지난해 우리 시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당위성에 대해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세종시에서 '개발이

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인 LH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올해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우리 지역의 경제·산업·건설사업 등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 모두가 코로나로 누리지 못한 일상을 되찾고, 시민 여러분께서 소원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내실 있는 공교육 강화 정책 적극 지원하겠다

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수업을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의 체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지난 1년여 간 교육 주체의 노력으로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한 새로운 교육 방식이 학교 현장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변화에 맞는 교육 체계의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세종교육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들어봤다.

Q. 그동안 의정 성과와 함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안전위원장에 취임한 후 짧은 시간 동안 세종시 아이들의 행복

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한 현안질문 등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들을 실현해 냈습니다.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4분기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시작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기 실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평범하면서도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현장형 의원을 자처했던 만큼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계층과 진

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세종시 난제들을 해결해보고자 대화의 장을 만들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간담회 등 일정이 보류 또는 취소 되고 말았습니다. 온택트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현장감과 동시에 여러 사람을 대면하며 소통하고자 했던 열린 의정활동 위축이 무엇보다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Q. 위원회 차원에서 역점 사안은 무엇인지?

첫째, ‘일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식, 교육격차 해소 등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교육안전위원회 의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의회,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더 내실 있는 공교육 강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쌍방향 원격수업을 늘리고, 온·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온-오프라인 학습을 연계한 교육법), 에듀 테크 등으로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학습결손, 돌봄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 정책을 더 내실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소통하는 교육안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장형 의원을 자처했던 만큼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계층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우리 세종시 난제들을 해결해보고자 오래전부터 간담회 등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시민 및 공직자들과의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거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제안 받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열린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넷째, ‘더욱 발전하고 역동하는 교육안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펼침과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 등 현안 해결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Q. 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및 제정 계획은?

지금 세종시의 교육정책은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뉘 만큼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변화된 교육계의 변

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사업을 찾아야 할 것이라 봅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는 이제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대면교육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상황에서도 교육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연한 행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기간제 근로자, 방과후활동 관련 종사자, 학원 등 업계 종사자 분들이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 세종시 학생들의 흔들림 없는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회복과 개혁’을 중점과제로 삼아 블렌디드 러닝, 에듀테크 그리고 재택근무 확산에 대비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꾸준히 세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회복 될 경우를 대비해서 원격수업, 재택근무, 이동 제한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교육·문화·예술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와 전환, 그리고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국이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어 코로나19 위기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정부 및 지자체 방역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에 충실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밀폐·밀접·밀집 장소 방문자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놀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 체제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주머니가 넉넉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안전위원회가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안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의회



NEWS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 만장일치 가결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건의안 채택 등 결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과 '선거사무원 수당 건의안'이 4월 14일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을 합의한 데 이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 위치한 의장협의회 사무실의 세종 이전은 공식화되었으며, 향후 실무적 차원에서 사무실 위치 및 이전 방법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태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27년간 동결돼왔던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선거사무원 및 투개표 관계자 수당의 현실화에 대해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세종과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등 총 17개 안건을 수렴하고, 이태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세종시의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4월 23일 의회청사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일본정부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철회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와 일본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및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도 함께 주문하였다.

이태환 의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 피해를 끼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일본은 이번 결정을 반드시 철회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세종시의회,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종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 4월 2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세종시청·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2020회계연도 통합 결산 결과 세입은 2조 2,156억원 세출은 1조 6,818억원이며 순 세계 잉여금은 전년 대비 1,330억원 증가한 4,086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세입 결산은 9,418억원 세출 결산은 9,016억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은 98억원 규모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 ▲예산 항목별 집행을 부진 사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무운영의 합당성 ▲계산의 오류와 실제 수지 부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시 재정 건전성 향상은 세종시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철저하게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시 예산에는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보다 나아지게 만들어 달라는 다양한 요구와 수요가 담겨 있다”면서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예산 집행이 목적에 맞게 적시 적소에 잘 쓰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개최하는 제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회계연도 결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왼쪽从左부터 시계 방향으로 신충민 세무사, 오영택 前 세종시 건축과장, 장진섭 前 세종시교육청 총무과장, 윤철원 전 세종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순열 의원, 안찬영 의원, 유선진 회계사

세종시의회,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격려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이윤희 부의장은 빈틈없는 방역 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격무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두 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태환 의장과 이윤희 부의장은 권근

용 세종시보건소장과 박미선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장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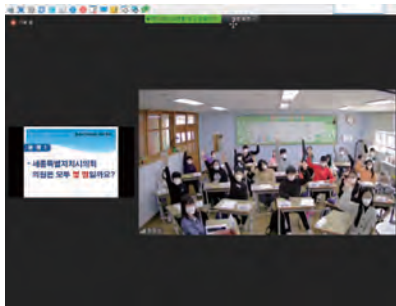
이날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격려 방문에 고마움을 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업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윤희 부의장은 “세종시민 모두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만큼 더욱 힘내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태환 의장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와 각오로 의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2021년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 성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2021년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학습 여건에 맞춰 작년 하반기에 첫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실시하여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에도 으뜸초등학교(고운동소재) 6학년 3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의회교실은 세종시의회 본회의장과 현재 등교 수업 중인 으뜸초등학교 6학년 교실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현장감을 높였으며,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과 의회·으뜸초등학교와 관련한 퀴즈풀이, 학생들이 직접 시 의원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는 ‘모의 본회의’ 순으로 이뤄졌다. 으뜸초등학교 학생들은 ‘청소년 놀이터 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채택하는 등 현대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의 본회의에서 청소년의장 역할을 수행한 으뜸초 6학년 가람반 학생은 “의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라 떨리고 긴장됐지만 친구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도 했다. 다음에 다른 역할을 맡아 또 해보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코로나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으뜸초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의회의 의사결정을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세종시의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은 코로나19 진정 국면 시 본회의 방청과 의회 견학 등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 세종시에서 열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지방의회 30년 기념행사’가 오는 7월 초 세종시에서 열린다.

올해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활보다 앞서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되새기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제3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30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는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 결정에 이은 의미 있는 성과로 해석된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내년 1월 지방자치제도 전부 개정 법률의 발효로 올해는 진정한 자치 분권의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준비의 기간이 될 것”이면서 “세종시에서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 창구 상시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가 오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제보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제보 대상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 불편사항 등이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제보 내용을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에 올리거나 현장 방문 또는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시의회 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실 의사기록담당), 팩스(044-300-7219)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 열린 국회 찾아 국회법 개정엔 힘 실어



2월 25일 이태환 의장 · 이윤희 부의장 · 유철규 위원장 동행... 홍성국 · 강준현 국회의원 등과 협력방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이윤희 부의장, 유철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은 2월 25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국회를 방문해 국회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등은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인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물론,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만나 국회법 개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태환 의장은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 설계비 집행과 나아가 국회법 개정 논의가 이전 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분석과 함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로 약 1조원에 가까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1~2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월 29일 대회의실에서 제1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태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문위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세종시의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손인수 윤리특별위원장은 "의회 내부의 자정 노력과 함께 자문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회 쇄신과 혁신 과제들을 발굴하여 향후 의회 운영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여 위원들은 "세종시의회가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놴. 2월 26일에 열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 선출과 자문위 운영 세칙안 및 의회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자문위는 호선에 의해 고려대학교 김정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자문위 운영 세칙안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 결과, ▲의회운영 투명성과 반부패 등을 위한 혁신적 대책 및 주요 과제 수립 · 발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 제시 ▲각계각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평가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세종시상인회연합 집회 현장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에서 진행된 세종시상인회연합 집회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이태환 의장과 이윤희 부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의원 등이 동행하여 집회에 참가한 상인들을 위로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세종시상인회연합은 집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단축 보상과 영업 시간 연장 등 정부와 세종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태환 의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상인들을 위한 보상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집회에서 나온 지역 상인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시 차원에서도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참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1월 21일 ‘지방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응원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시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36만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손팻말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이태환 의장 공식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태환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나눔으로 하나 되는 기부 챌린지 동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1월 18일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진행된 '나눔으로 하나 되는 기부 챌린지'에 동참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난 12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34일간 추진하는 '나눔으로 하나 되는 기부 챌린지'는 지역에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환 의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나눔으로 따뜻한 세종시를 만들어요!'라는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의장은 “나눔의 실천과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따스한 연대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할 시기”라면서 “세종시의회 역시 사회 복지 분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집행부와 새해 첫 의정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월 11일 의정실에서 새해 첫 의정 간담회를 열고 새해 업무 추진 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의정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 계획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종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교육청 소관 업무와 관련해 조치원중 이전 재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종하이텍고 등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학습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습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세심한 교육 환경 구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태환 의장은 “올해는 2030년까지 계획된 행복도시 건설의 마지막 3단계에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라면서 “지난 2014년에 수립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기대를 충실히 반영해서 국회 세종시대와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소식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총 7건 대표 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등 7건이 3월 23일 제 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시장에게 반려동물의 실태와 길고양이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반려견 보험 가입을 통해 현재 저조한 동물 등록률(市 등록 10,500여두, 시 추정 약 35%)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상 상비약 외에 심야 시간대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심야약국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외에도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고령층과 청소년 근로자 등이 고용 안정과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한솔동 인도 제설 작업 참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한솔동)은 1월 8일 약 10km에 달하는 한솔동 제설 취약 지역에서 자율방재단 위원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인도 제설 작업에 참여했다.

이날 제설 작업은 지난 6일 저녁부터 7일 오전까지 세종시 전역에 평균 7cm에 가까운 눈이 내리면서 한솔동 지역 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눈을 치우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체감기온 영하 10℃를 밑도는 혹한에도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을 비롯해 자율방재단 위원 등 20여명은 제설 작업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안찬영 의원은 “차 도로에 비해 제설 작업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보도 제설 작업은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고운동)은 3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하 치유농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치유농업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 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치유농업 육성 조례안은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에서 심의된 후 3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공공급식지원센터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3월 8일 새 학기를 맞아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136여 개소에 21,554개에 달하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전담 기관으로 지난해 10월 5일 개장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공공급식 운영 현황 보고와 공공급식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 및 센터 직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상병헌 의원은 저온 및 냉동 보관창고에서 식자재 보관 상태와 원산지 및 식자재 수량 등을 직접 확인했다.

상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리 지역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신선한 식자재가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안전성 검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제천뜰 근린공원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3월 19일 제천뜰 근린공원에서 열린 '제천뜰 근린공원 시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종촌동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촌동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뜰근린공원 시설 개선과 수목식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단풍나무 등 그늘이 많은 수목 식재 ▲거리 공연 등이 가능한 야외무대 설치 ▲보행교 야간 경관 조명 및 보행등 설치 ▲정자목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무 식재 ▲트리 하우스, 짚라인 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쿨링포그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 다양한 시설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임채성 의원은 “종촌동 제천뜰근린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대표 휴식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공원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근린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휴식 공간 및 수목 등이 부족한 제천뜰근린공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협의체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7월 중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새롬동 둘레숲길 시민추진위 실시설계용역 대상지 현장방문



시민추진위 백흥기 위원장은 “추진위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만족도가 높은 새롬동 둘레숲길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은 현장 방문에서 시민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시 관계부서와 실시 설계용역 업체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숲길 조성 우수 사례를 반영해 내실 있는 용역 실시를 주문했다.

새롬동 둘레숲길 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백흥기)는 3월 5일 숲길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대상지를 현장 방문했다.

이날 새롬동 둘레숲길 시민추진위(이하 시민추진위)는 기존 등산로 및 배수로 상태 점검뿐 아니라 숲길 신설 구간과 유아 놀이숲 대상지를 찾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세종시는 일상 속 휴양 및 치유를 목적으로 한 산림 체험 수요 증가에 따라 ‘새롬동 외부순환 둘레숲길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을 오는 4월 16일까지 진행한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가득초 보행교 개선 방안 논의

새뜸마을 아파트 단지와 가득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보행교 이용과 관련된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과 세종시청·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2월 5일 한자리에 모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중 완공되는 보행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철거 구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자전거 경사로 설치 및 제설작업을 위한 주민봉사단 운영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청·교육청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토대로 보행교 경사로 철거 구간 후속 조치 점검과 주민봉사단 운영 방안 수립 등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관계부서가 이 문제를 그동안 깊이 있게 고민해왔던 만큼 가득초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이러한 행정적 조치 사항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전달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수혜자 중심의 행정, 주민에게 답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한솔동)은 2월 3일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열린 한솔동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에서 “첫마을 방송국 개설과 운영, 한솔동 복검 내 실내 수영장 설치, 학교 과밀화 해소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 등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행사장에 나온 한솔동 주민 대표단 5명을 비롯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한 주민들은 생활 불편 사항과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안찬영 의원은 “신축년 새해 첫 시민과의 대화가 시의 만형격인 한솔동에서 열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잘 반영해서 수혜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 미래 비전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 방향으로 만들어나갔으면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고원식 횡단보도 개선방안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새롬·다정·나성)은 1월 21일 국토교통부와 세종경찰서를 방문해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실제 고원식 횡단보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과 매뉴얼 등에 명시된 경사부 규격 기준이 상이한 데다 세종시의 경우 시청과 LH 등 사업 시행 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간 균일하지 못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반복되면서 저상버스 노선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와 세종경찰서 교통관리계에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사부 규격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손 의원은 “차량 주행 감속 효과와 차체 충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사부 기준이 마련되면 차량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 감소와 더불어

저상버스 노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손 의원은 “차량 주행 감속 효과와 차체 충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사부 기준이 마련되면 차량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 감소와 더불어 저상버스 노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속도제한 단속카메라 설치한 연서면 월하오거리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지난해 12월 22일 현장방문에서 “지난 3일 연서면 월하오거리에 속도제한 단속카메라가 설치 완료되어 주민 보행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속도제한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지난해 10월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다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연서면 거주 아람고등학교 학생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왔다.

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과 긴급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갖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애써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경우 도로 확장 계획으로 인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상 의원은 “추후 단속 카메라를 옮겨 설치하더라도 누구든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겨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행복청과 경찰서, 시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

끝에 예산 약 1억원을 들여 사고 지역 도로 양방향에 50km 속도제한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이뤄졌다.

상 의원은 “지난해 이곳에서 어린 학생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종시 전역의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행안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괴화산 근린공원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3월 11일 대회의실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 둘레길 조성 등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은 3월 11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소담동과 반곡동 주민들과 함께 괴화산 근린공원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괴화산 지킴이, 소담·반곡동 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괴화산 근린공원 등산로와 내부 산책로 개선, 등산객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근린공원 조성 ▲등산로 및 내부 둘레길 정비 ▲조망권이 좋은 장소에 전망대 설치 ▲쓰러진 나무 등 등산객을 위협하는 장애물 적기 제거 ▲쓰레기통 설치 및 쓰레기 수거 ▲에어컨과 의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윤희 의원은 “오는 6월 말 LH로부터 괴화산 근린공원 관리 등 업무를 세종시가 인수받게 되는데, 그 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및 후속 조치 이행 점검 등을 거쳐 향후 관리 비용에 부담이 따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정표 등 안내 표지판 설치 ▲둘레길 폭 확대 ▲소음 발생을 고려한 에어컨 설치의 적절한 위치 ▲괴화산과 세종시 둘레길 구간 연계방안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 둘레길 조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차성호 의원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농업발전기금,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해야

5분 자유발언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은 3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발전기금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전환 ▲농산물 가공업체 등에 대한 지원상한액 현실화 ▲세종시 전용 농·식품 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다.

차 의원은 “농·식품 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투자 이익금이 다시 농업발전기금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희 의원

괴화산에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

6월경 인수 앞둔 괴화산에 시민들을 위한 둘레길 조성해야

5분 자유발언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은 3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괴화산에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 ▲보행약자 등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장애길 조성 ▲원형지 보전지역인 괴화산 환경을 감안한 구절초 등 다년생 꽃길 조성 ▲반곡동 천주교 성당 옆 유치원 부지에 아이들의 생활놀이터 조성 등이 거론됐다.

이 의원은 “괴화산 정상에 있는 고려시대 추정 유적인 석축유구의 보존 사례처럼 괴화산 정비는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

정보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화폐 자생력
갖춰야

자생력 있는 지역화폐 위해 학생증· 청소년증에 여민전 기능 탑재하자

5분 자유발언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3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여민전에 색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사원증 발행 ▲기부 및 전자투표, 설문 서비스 등의 플랫폼 활용 사업 ▲시민 참여형 마일리지 사업 ▲데이터 거래 발생 수익을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 제도와 공연관람료 페이백 제도 등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여민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화폐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의 이점과 매력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

지역 먹거리 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학교급식 먹거리 공급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

5분 자유발언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3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 향상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 대안으로 ▲가변작부체계 활용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관내 업체 발굴 및 육성 지원 ▲친환경 농산물 공급원칙 수립 및 친환경인증농가 적극 육성 ▲변경된 축산물 공급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활성화로 공적 검증체계 보완 ▲시장가격을 반영해 적정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식품의 품질 확보 ▲수산물, 가공식품, 김치, 전통장류의 경우 본사 직거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배송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시 직영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학교급식점검단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희 의원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세종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과
협력문화의 새 장을 열 수
있길 기대

읍면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 통해 세종교육 균형발전 완성해야

5분 자유발언

박용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세종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선 방안으로 ▲읍면교육발전협의회 인적 구성의 균형성과 다양성 확보 ▲읍면교육발전협의회 내 권역별 협의체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간 갈등 극복을 위한 심리적 거리 좁히기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시작에는 교육이 있다”고 강조하며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세종교육의 균형발전과 협력문화의 새 장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세 의원

여성친화도시 세종,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코로나19로 성 불평등 악화 ... 성평등 정책 전반 재점검해야

5분 자유발언

이영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월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성친화도시 세종,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 내 사업 전담 전문인력 배치 ▲부서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각 실국별 여성친화도시 관련 성과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도입 방안 마련 등이 중요하게 거론됐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성 평등은 시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해야 할 의제”라면서 “본 의원이 지난 2월 시작한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의 꿈을 키우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필요한 세종형 특화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현옥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치유 농업 활성화 방안
제시

코로나19 우울감 등 극복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해야

5분 자유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고운동)은 3월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치유 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체계화된 치유 농업과 치유 농업 효과 및 다양한 사업 모델이 연구되고 있다”며 “실제 연구 결과 치유 농업 활동으로 우울감 60% 감소 효과 등 정신·신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 농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치유 농업 분야의 산업적 육성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연계방안 마련 ▲근린공원 개선을 통한 시민 참여 적극 유도 ▲농촌 인적·경관 자원에 치유 기능을 접목한 도시와 농촌 상생 발전 차원의 농촌 관광 활성화 유도 등이다.



서금택 의원

조치원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필요 강조

조치원, 인구 10만 도시 만들어야

5분 자유발언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은 3월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인 조치원읍을 인구 10만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인프라 구축 및 주변 국가산업단지 유입 인구 등을 감안한 주택부지 확보 ▲조치원 인구 유입 촉진 방안 마련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재개발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극 검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다양한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 등이다.

특히 서 의원은 “조치원읍은 행복도시와 함께 주거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하며,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시정의 역량을 모아 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평석 의원

면 지역 내 31곳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의 가치 제고
방안 제시

문절사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해야

5분 자유발언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면)은 3월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면 지역 내 31곳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의 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술연구용역을 통한 문절사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추모제 및 관련 자료 발간 등 다양한 선양사업 계획 ▲문절사 주변 환경 정비 및 관람객을 위한 공공 편의시설 조성 등이다.

특히 시 문화재 9호인 모인당의 경우 효와 예절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문화재 정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속히 주변 환경 조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성호 의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개선방안 제시

부모 부담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보험료 지원 강화해야

5분 자유발언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면)은 3월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고의 세종시 보육서비스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현금 지원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목표로 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중 부모 부담의 차액 보육료 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 아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세종시인 만큼 보육 지원 확대 노력과 민간 어린이집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어느 시·도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성 의원

세종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금강보행교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 개통과 함께
널리 홍보

금강보행교, 세종시 대표 랜드마크로 활용해 관광객 유치해야

5분 자유발언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3월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금강보행교 개통 시기에 맞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세종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금강보행교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 개통과 함께 널리 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중앙녹지 공간을 테마파크 형태로 아우르는 명칭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홍보방안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의원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설 작업
계획 추진 강조

제설제 피해 최소화·민간제설단 참여 유도 등 방안 마련해야

5분 자유발언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3월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와 민간제설단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설 작업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제설단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제설 작업을 위한 유류비와 피복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설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장비 및 인력 지원계획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민간제설단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제설단 인력 확보와 더불어 마을 안전을 책임지는 노고를 격려해 달라”고 제언했다.



안찬영 의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제시

생활권별 상권 특성에 따라 맞춤형 상권 활성화 정책 펼쳐야

5분 자유발언

안찬영 의원(한솔동)은 3월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상권 침체 회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상권 형성이 덜 된 지역 ▲상권 활성화 유지가 필요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었다가 침체된 지역으로 3가지 유형을 분류한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상권 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업종 유치 유도 ▲공실 상가에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적극 유치 ▲건조한 지역별 상인 네트워크를 통한 상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거론했다.

안 의원은 “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상권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유철규 의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야외체육시설 및 주차장
확대 설치 제안

3생활권 수변공원 내 세종마루공원 조성 계획 바로잡아야

5분 자유발언

유철규 의원(보람·대평동)은 1월 2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마루공원 조성 계획을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야외체육시설 및 주차장 확대설치 등 꼭 필요한 시설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유철규 의원은 “각 권역별 특성에 알맞게 지구단위계획과 세부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2년여 전에 수립된 세종마루공원 조성 계획을 현재 3·4생활권 수변공원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주차장 확대설치 등의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를 중심으로 행복청과 LH세종본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등과 권역별 시설물 조성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기존 계획에 포함된 언덕 위 시설 관리는 비용과 안전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세종마루공원 조성 계획을 현실에 적합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희 의원

친환경 자원 교육과
관광 명소로서 도심과
공존하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등 방안 제시

친환경종합타운, 소통과 협력 통해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야

5분 자유발언

박용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월 2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친환경종합타운,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주요 내용으로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정책 재정립 ▲입지 선정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시 전역을 아우르는 친환경 자원 교육과 관광 명소로서 도심과 공존하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국내외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하남 유니온파크와 오스트리아 빈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근거로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입지 선정을 위해 재공모 중인 친환경종합타운은 혐오기피시설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의원

농업 부산물 적정 처리
지원을 통해 농촌 불법 소각
행위를 조기에 근절해야

보다 적극적인 농업 부산물 파쇄 지원 으로 불법 소각 예방하자

5분 자유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1월 25일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업 부산물 적정 처리 지원을 통해 농촌 불법 소각행위를 조기에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파쇄 등을 통한 적정 처리 대신 여전히 불법 소각이 성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단속 과정에서 소각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칫 범법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읍·면별 농업부산물 무상 파쇄 지원단 운영 ▲농업부산물의 비료화 활용 적극 홍보 ▲파쇄 지원 사업 등 홍보를 통한 소각행위 조기 근절 등을 제시하고, 화재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소각행위 근절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

위험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소규모 모둠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효과 높여야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부작용 증가...경각심 가져야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여진동)은 1월 15일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순열 의원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사이버 폭력과 낮은 사람의 접근, 도박 노출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은 사용 억제보다는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활용이 목적인 만큼 '중독'보다는 '과의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세종시의 경우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세종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위험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소규모 모둠교육'을 비롯해 '독자적인 기관 구축'과 '정보기술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향유하는 문화 확산'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이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채평석 의원

환경기초시설 편의시설
계획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해야

환경기초시설에 시민들이 찾는 주민 편의시설 조성해야

5분 자유발언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면)은 1월 1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주민이 찾아가는 환경기초시설을 조성하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채 의원은 "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동시민 스포츠센터를 건립한 결과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자리잡았다"면서 "하지만 연동부강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풋살장의 경우 이용자 수가 0명에 가까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주민 편의시설 계획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과 활용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환경기초시설에 주민들이 원하는 다목적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되어 활발히 이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및 개발부담금
적극 환수 조치 제안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점검 및 대비해야

5분 자유발언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월 15일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실하지 못한 세종시의 현 재정 상태를 우려하고 재정 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에 나섰다.

세수증대 방안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 취득·등록세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기대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 및 법 개정 촉구 ▲대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관리 전환 추진 ▲개발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적극 환수 조치 ▲기업 유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상 의원은 “세종시는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가 17만 5천원에 불과하여 전국 광역시도 평균 40만 3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세종청사 등 비과세 대상으로 인한 세수 미확보를 반영하고, 세종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금택 의원

세종시가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나가자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탈탄소화 사업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5분 자유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은 1월 1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나가자”고 제언했다.

정책 대안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은 조례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주행 선도도시이자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 등 세종시의 강점을 살린 탄소배출 절감 노력 ▲저탄소 신산업 중심 기업 유치 및 육성 ▲생활쓰레기 반입 총량제 실천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스마트 공장 등 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제조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저탄소 산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짜임새 있는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지역 특화 통계를 통해 정책 수립에 탄탄한 기초 쌓아야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3월 15일 열린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이행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통계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 의원은 ‘빅데이터를 활용 통계 승인’과 ‘통계와 빅데이터 체제 간 통합’ 등 타 기관 사례를 들어 세종시 역시 지역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를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만의 특수한 교육 상황에 대비해 국가승인통계 외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통계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했다.

끝으로 “이번 시정 질문을 계기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세종시 특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여 세종시 정책 수립에 탄탄한 기초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이순열 의원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계획 없던 공공시설물 인수로 인한 과중한 운영비 큰 문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보람·대평동)은 3월 15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시정 질문에서 “당초 계획하지 않은 공공 시설물 인수로 향후 운영비용 부담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 질문에서는 행복청이 세종시의 의견 청취나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정부청사 복합편의 체육시설을 세종시가 관리·운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한 세종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내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종시민을 대변해 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외에도 유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과 관련된 질문에서 공동주택 준공 시 시공사 아닌 입주 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입주 청소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철규 의원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박성수 의원

2030 명품 세종교육특별시 완성을 위한 제언

박성수 의원은 3월 15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그간 세종교육청이 펼쳐온 세종교육 정책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 지적 ▲신설학교 개교 지연 및 새나루유치원·초등학교 적기 개교 대책 ▲철저한 수용계획 분석을 통한 적절한 고등학교 설립 추진 ▲세종시 첫 중·고등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 ▲성공적인 직업계고 재구조화 방안 ▲스마트시티 내 안정적인 교육 분야 구축 및 추진 등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박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위원 구성 등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공간 마련을 통한 예산 수립 과정 참여 분위기 확산과 제도 정비, 주민자치회와 연계성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상병헌 의원

자족기능 확충 위해 유망기업 발굴·육성하고 우량기업 유치해야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3월 15일 제6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 출범 이후 기업 유치 성과와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 더욱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 의원은 유치기업 수, 고용현황, 법인지방세 징수, 광역시도 법인세액 비교, 기업 폐업률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세종시의 기업 유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기업유치 국고보조 비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종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우량기업 유치전략 수립 및 신규 사업체 발굴과 육성 ▲기존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교육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등 사후 관리 ▲법인 사업체 폐업률 감소와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유치한 기업의 현지 고용에 대한 기여도 점검 ▲시민 편익을 위한 유치기업의 영향도 고려 등이 언급됐다.

긴급현안질문



세종시, 감사위원회 독립 명문화 필요성 강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보람·대평동)은 1월 1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임명직 공모에 인사청문회가 필

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유철규 의원은 “올해 세종시에서 발표한 세종시민과의 실천약속 7대 과제 중 첫째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지난해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유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하나 이번 감사 처리 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장의 직

무와 관련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세종시 교통공사 사장 등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 시의회의 청문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사자성어인 줄탁동시(咄嗟同時)를 인용해 “세종시의회와 시청이 서로 협력한다면 달걀 껍데기를 깨고 병아리로 새롭게 변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세종시민 모두가 방역을 위해 동참하고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며 “힘든 시기일수록 내실을 다지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시민 중심의 행정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씩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67회 임시회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1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연구모임 신청의 건과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현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영세)'과 '(가칭)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서금택)' 등 3건의 등록을 승인했다. 의회운영위는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김원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전 준비 등 대응 철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의견 상시 접수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의 접근성 제고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소규모 현장방문 방안 모색 ▲의회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를 비롯한 청사 내 철저한 방역활동을 주문했다.

제6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 심사

3월 1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3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 심사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미안마 군부의 유혈 사태에 대한 규탄과 쿠데타 즉각 중단, 정치 인사들의 조속한 석방, 비상사태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우는 미안마 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위원장



노종용 부위원장



손인수 위원



이윤희 위원



차성호 위원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
운영
위원회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행정
복지
위원회

제67회 임시회

조례안과 동의원 심사

제6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18일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원 등 11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 위)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원' 등 동의원 2건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안건 중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1건을 수정 가결했다.

2021년 업무 계획 보고·청취

제6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등 12개 소관 부서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철규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시민들이 적지 않은 만큼 새해에는 시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제68회 임시회

조례안 및 동의원 30개 안건 중 26건 원안 가결 4건 수정 가결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7~18일 양일간 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동의원 등 총 30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원' 등 기타 안건 9건을 심사한 결과 26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해 주민자치회 위원회의 해촉 사유를 추가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에서 '세종시민'과 '등록단체'를 동등하게 하고, 이용의 제한 사유와 이용료 반환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제외에 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법령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개념에 근거해 상위법에 맞게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지원과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



이영세 위원



이윤희 위원



이재현 위원



제67회 임시회

조례안 6건 심사 및 주요 업무 계획 청취

제6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6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조례안 6건을 심사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상버스의 운행이 불가하고 도로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는 구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저상버스 도입 및 노선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규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상임위 심의 전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월 18일부터 20일 까지 경제산업국 등 각 소관부서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제68회 임시회

3월 17~18일 양일간 조례안 등 27개 안건 심사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심사했다. 제1~2차 회의에서 27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6건, 의견 청취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등 25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신종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비 보조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보다 많은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따라 연령 조정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인 점을 강조하고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안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은 만큼 집행부에 철저한 정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산업 건설 위원회



임채성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상병현 위원



서금택 위원



손현옥 위원



채평석 위원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교육 안전 위원회



박성수 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



박용희 위원



안찬영 위원



이순열 위원

제67회 임시회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4건 심사

제6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올해 세종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여러 교육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만큼 올해는 온라인 대면 방식(온택트)을 활용해 교육 공동체를 위한 주요 업무 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 심사…주요업무 계획 청취

1월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조례안 4건을 심사한 결과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다.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집행부와 머리 맞대

2월 18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고교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학년도 진로·진학 추진계획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결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2021학년도 평준화지역 후기고 배정 결과 및 분석 등 세종시 고교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제68회 임시회

행감 계획 승인 및 조례안 13건 심의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조례안 13건을 심사했다. 또한 양일간 조례안 심의 결과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고, 5건을 수정 가결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들이 교육 여건 개선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향후 계획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1차 추경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4기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4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이하 공공특위)는 3월 12일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특위 위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로부터 지난해 10월 28일에 실시한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행복도시 사업 준공(8-1차) 인수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사업준공(8차) 인수대상 시설물 현황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까지 LH로부터 2개 시설물과 기타시설 15개, 행복청으로부터 4개 시설물을 인수받을 예정이다.

3월 내 계획된 8-1차 사업 준공에 대한 시 의견을 제출한 뒤 3~4월 중 인수인계 절차에 착수하게 되는 대상으로는 집현리 자동크린넷 8집하장, 중앙공원(1단계), 1-1생활권 한옥마을, 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 3-1생활권 CNG부지 등이 있다.

공공특위는 합동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 중 후속 조치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면밀히 살피는 한편, LH에 합동점검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종시내 고사목 발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중점적인 질의가 이뤄졌으며, 공공특위는 집행부에 고사목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공공특위의 개선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 조치가 미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산학연 연계 가능한 대학캠퍼스 조성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2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추진 상황과 공동캠퍼스 입주심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유치 특위)가 세종시 차원의 독자적인 대학유치 전략 수립을 요구한 결과, 시비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4-2생활권 단독캠퍼스 부지 내 대학유치 전략 및 실행계획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선정 결과 보고에 의하면 임대형 캠퍼스 부지에 서울대학교 · KDI국제정책대학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밭대학교 등 5개교가, 분양형 캠퍼스 부지의 경우 공주대학교 · 충남대학교 등 2개교의 입지가 확정되었으며, 잔여 필지 4곳은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대학유치 특위 위원들은 ▲대학 단지 내 정주여건 마련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 구축 ▲민간기업-연구기관-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시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 ▲행복청과 LH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을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이번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확정으로 세종시의 대학 유치 추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집행부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들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향후 연구용역 추진 상황과 단독캠퍼스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 특위 차원에서도 공동캠퍼스 조성 진행 상황과 단독캠퍼스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과 개선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 특위는 상병헌 위원장과 차성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종용, 박성수, 서금택, 안찬영, 이윤희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4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국회법 개정 지원계획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충청권 공조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시의 적절한 계획 이행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여론 조성과 확산에 기여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 이후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 참석 등 그간 활동 성과 등을 정리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철규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동력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특히 올해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된 데 이어 지난 2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집행부 등과 활발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제3대 후반기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유철규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원식, 노종용, 박용희, 상병현, 서금택, 손인수,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임채성, 차성호, 채평석 의원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연구모임 발족...첫 간담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월 19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을 발족하고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이동수단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여 자전거도시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순열 대표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안찬영·손인수 의원과 안용준(대전세종연구원), 이재영(대전세종연구원), 정경욱(한국교통연구원), 최병조(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7명이 연구모임 활동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수열 사무관(교통과), 김진섭 과장(치수방재과) 등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모임 활동 운영 방안과 일정을 협의하고 '자전거·PM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간담회에서 연구 주제 논의

연구모임은 3월 1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욱 연구위원이 발표한 '행복도시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토대로 세부 연구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세종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으로는 ▲간선망 등 도로망 완성도 부족 ▲일부 구간 단절 및 자전거 거치 시설 부족 ▲과다한 불라드 설치로 인한 이용 불편 및 안전 위협 ▲위험 구간 안전 및 안내 표지 시설 부족 등이다.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모임 논의 과정에서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보행자와 자전거 안전 등 교통안전 교육과 연계한 세종시 차원의 자전거 면허제 도입 ▲에너지 총량제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방안 수립 ▲기존 자전거 이용자와 잠재 수요자인 미래 세대를 위한 타깃화된 정책대안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연구모임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전거 안전 등 교통안전 교육'과 '간선 및 지선 개념의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을 주요 연구 주제로 선정하고 향후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연구모임의 역할을 다 하여 세종시가 자전거 친화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최근 구성된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 활동을 세종YMCA와 함께 주관할 예정이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점검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6생활권에 거주하는 17세 이상 시민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3월 27일 출성식 이후 9월까지 시민 주도로 매월 1회 정기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순열 대표의원



손인수 의원



안찬영 의원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월 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임채성 대표의원과 차성호·이윤희 의원을 비롯해 목원대 박선규 교수, 동원측량설계공사 박선종 대표, 세종시 규제개혁담당관실 박건형 변호사, 세종시 우정훈 도로과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법정도로란 마을안길 및 농로 등 관계 법령 이외의 관습적 도로를 일컫는다. 세종시의 경우 읍·면 지역 내 토지 가격의 급등으로 재산권 행

사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사례 조사 및 분석,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사,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종시의 특성을 감안해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 분쟁 사례 및 조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듣고, 연구모임의 연간 활동계획 및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비법정도로 분쟁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습적 도로의 공공성이 상충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사례 분석과 면밀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임채성 대표의원



이윤희 의원



차성호 의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모임 발족...연간 활동계획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월 26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정진기 예산담당관과 도시재생과 정제문 재생정책담당 등 관계 공무원, 홍순기 전 세종과장과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연구모임은 지난해 기준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 산정액(17만원)이 전국 광역시·도 평균(40만원)에 비해 적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교부액 확충에 따른 시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 재정 및 보통교부세 현황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에 이어 활동계획 및 일정 협의, 연구모임의 기본방향에 부합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차 간담회서 연구용역 주요 과제 논의

3월 25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주요 과제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김흥주 연구위원의 '세종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선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연구모임에서 추진할 연구용역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면밀한 보통 교부세 분석을 통해 세종시 출범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재정 수요 확보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예산 규모에 맞는 연구 과제의 선택과 집증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심도 있게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시 재정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세종시의회, 실질적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한 특화 사업 발굴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는 2월 25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영세)'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세종시가 2016년 말 여성친화도시 1단계에 지정되면서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형 특화사업'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과 박성수·손현옥 의원, 종촌동 주민자치회 이경숙 회장,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시민주권회의 여성아동청소년분과 홍만희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회원 외에도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황희경 취업교육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세종시 1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우리 시 모든 여성들이 당당하고 평등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간담회 개최 여성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연구모임은 3월 3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 분야 중 '세종시 여성 사회·경제활동 발전 방안'에 대한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황희경 팀장의 발표에 이어 이영세 대표의원의 진행으로 주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황희경 팀장은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발맞춰 여성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세종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세종여성능력개발센터 설립에 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 초당적 논의의 발판되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중요한 초석이 될 공청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4일 열린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후 적기에 여론 수렴을 위한 초당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36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에서 다뤄야 할 핵심 의제는 단연 ‘국회법 개정’이다. 지난해 홍성국 국회의원(세종 갑)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논의를 마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번 공청회에 국회 운영 개선소위원회 소속 9명 위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세종 이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역사적인 첫 공청회는 국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의 장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가 공히 ‘행정수도 완성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만큼,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세종을 향한 전국적 결의에 이제는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로 화답할 차례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기까지 화합과 협력의 자세로 논의의 자리에 함께 할 것이며, 세종시민들과 전국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함으로써 국회 세종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

2021년 2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7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대표발의 차성호 의원

주요내용 지난 2020년 7월 3일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당초 국민과 지방의회가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바, 이에 기존의 '지방자치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지방의회법'을 별도로 신설해 지방의회의 독자적 위상제고와 권한을 확보해 주기를 촉구함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표발의 박성수 의원

주요내용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내용을 추가 신설함 (안 제4조), 공동주택 내 유휴지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제2항) 등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대표발의 손인수 의원

주요내용 저상버스 등 관련 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목적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조), 저상버스 보급 촉진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등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표발의 채평석 의원

주요내용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2)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대표발의 박용희 의원

주요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감염병 대책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대표발의 이순열 의원

주요내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원격수업 운영 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표발의 이윤희 의원

주요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차상위계층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차상위계층 추가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5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표발의 이재현 의원

주요내용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를 우리말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으로 순화하고, 공개모집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안 제26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표발의 임채성 의원

주요내용 인센티브 지급대상의 범위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3조)

회기별 처리 안건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council.sejong.go.kr)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6건
2차 본회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등 2건
3차 본회의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등 71건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대표발의 유철규 의원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토대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원안가결)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주요내용 시청과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오류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감사 기간 : 2021. 6. 1. ~ 6. 9. (9일간)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원안가결)

대표발의 차성호 의원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안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한 정치 인사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비상사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대표발의 서금택 의원

주요내용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제5조),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를 두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추진에 관한 자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대표발의 상병헌 의원

주요내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액의 산정조문을 변경함(안 제3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대표발의 임채성 의원

주요내용 “신중년”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등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지지 결의안(원안가결)

대표발의 노종용 의원

주요내용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대표발의 상병헌 의원

주요내용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과 사업비의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사업비의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추진,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제도 시행 등으로 정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조 및 별표 1) 등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대표발의 안찬영 의원

주요내용 응급숙소 등 응급지원 사항 삭제(안 제2조제3호, 제5조, 제9조),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시민자원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안 제8조제2)

입법 정보

- 56 생활법령-솔로몬의 선택
- 61 법령 해석 사례
- 64 최근 시행 법령
- 66 주요 입법동향
- 70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생활법령 1

|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선택

나골프씨는 상가 복도와 로비를 무단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나요?



나골프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복도와 로비에 골프퍼팅 연습시설 및 카운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상가건물관리단으로부터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그 동안 공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① 나골프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은 치우겠는데 어차피 복도와 로비는 임대할 수 없는 공간인데 무슨 부당이득인가요?

② 상가건물관리단

복도와 로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이익을 반환하세요.

평결

정답은 ② 상가건물관리단입니다.

본 건 사안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관련 조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138 판결 등).”

따라서 원심은 종전 대법원판결에 따라 복도와 로비가 임대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

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3나26167 판결). 그러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입장을 바꿔 이러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나골프씨는 정당한 권원 없이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동안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0년 12월 2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2



|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선택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하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 같은 시기에 임신한 간호사는 15명이었는데, 나천사 간호사를 포함한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

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천사 간호사는 출산한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초기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과연,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나천사의 업무상 재해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나천사

임신 중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며, 출산한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정답은 ① 나천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본 건 사안은 母(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1)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

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영향으로 태아에게 선천성 질환 등의 질병이 생긴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나천사의 임신 중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며, 이와 같은 사실은 출산 후에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1년 1월 25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노사협약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적용되나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하늘법인 직원은 내부 인사 규정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노사합의로 만 58세 이후부터 매년 일

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여 매년 연봉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노사협약에 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법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노사협약만으로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유효할까요?

1 하늘법인 직원

이번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만 58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구조로 보수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하는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 없어요. 노사협약을 체결했고, 이는 이사회 의결 대상이 아니니 당연히 유효하죠.

2 하늘법인 이사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등의 변동은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노사합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확정이나 이행을 위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아쉽지만,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평결

정답은 ② 하늘법인 이사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인과 노동조합이 체결하여 노사협약에 새롭게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한국○○원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에서 만 58세가 된 직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1) 원심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보수의 인상이 아니라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이므로 ○○원이 구 한국○○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 절차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임

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 및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원이나 ○○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게 시행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평결일 : 2021년 2월 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4



|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선택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상가를 임대하여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던 나도운씨는 건물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가자 건강상 이유로 권리금 5천만 원을 받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평소 샌드위치 가게 운영이 잘 되는 것을 본 건물주인은 자신이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나도운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5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건물주인은 나도운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니 권리금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나도운씨는 건물주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인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평결

정답은 ① 나도운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계약”이라고 칭하고,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1)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와 (2)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임대인이 건물 매수 후에 갱신거절을 통보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을 하였다는 점과 임대인이 소유권에 근거하여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사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 판결).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

① 나도운씨

계약기간만료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든 없든 제가 그동안 가게에 투자한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제가 주선한 계약을 거절하고 나가라는 것은 명백히 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5천만 원 주세요!

② 건물주인

이미 15년이나 영업을 해서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데, 제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고 권리금을 받겠다고요? 이건 제 건물이라고요, 제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한 건데, 정당한 거 아닌가요?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참조).

※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다261124, 261131 판결 등 참조).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평결일 : 2021년 2월 2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5

|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선택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가땅주인은 나모델하우스社와 건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3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

이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건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나모델하우스社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가땅주인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

정답은 ② 나모델하우스 社입니다.

이 사건은 계약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을 살펴보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건본주택 건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다. 원

① 가땅주인

건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것은 나모델하우스社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이 종료되어야 줄 수 있습니다.

② 나모델하우스 社

중요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가땅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및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보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건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건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이 사례는 사정변경원칙의 요건에 부합된 것으로 나모델하우스社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땅주인은 나모델하우스社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평결일 : 2021년 3월 2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 사례 1



질의

(법제처-20-0560 / 회신일자 2021. 1. 22.)

「건축법」 제5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목의 범위(「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질의 요지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회답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바, (각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특정한 지목의 토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명문의 근거 없이 해당 대지를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2항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할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르면 토지의 분할 신청 시 지목변경이 먼저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건축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 해석 사례 2

질의

(법제처-20-0655 / 회신일자 2021. 1. 22.)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질의 요지

물건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각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서로 다른 경우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회답

물건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주민등록법령에서는 “세대” 또는 “세대원”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함)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같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관리하게 됨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세대” 또는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로 관리되는 세대인지 여부와 그 세대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도 세대주와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기록된 사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가족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는 사람에 한하여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는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

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도와 별개로 물건소재지만 특정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범위를 규율하면서, (각주: 2005. 6. 28. 행정자치부령 제2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법제처 2019. 10. 25. 회신 19-0267 해석례 참조) 특히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그 경매에 참가하는 자나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한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세대원”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소유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으면 같은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물건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 해석 사례 3



질의

(법제처-20-0646 / 회신일자 2021. 2.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질의
요지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각주: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함.)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신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각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이상 실시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수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려는 것이고, (각주: 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2.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이유·주요 내용 참조) 문언 그대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휴업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줄어든 급여가 휴업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종료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를 전제로 지급되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근 시행법령



0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1. 1. 30.] [법률 제16880호, 2020. 1. 29., 일부개정]

자연재난에 폭염, 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의 책무에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업무와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전문교육과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0호, 2020. 8. 18., 일부개정]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자·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878호, 2020. 8. 18., 일부개정]

현행법은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때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고, 조합이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 시행법령

0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65호, 2021. 1. 5., 일부개정]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0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5호, 2021. 1. 12., 일부개정]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0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7.] [법률 제17912호, 2021. 1. 26., 일부개정]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하여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상의 책무성 분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또한 학교복합시설로 설치 가능한 용도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와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입법동향



• 최신 공포법령

01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현행법은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는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02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37호, 2021. 1. 5., 일부개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액 기준을 낮추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03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78호, 2021. 1. 5., 일부개정]

최근 핀테크의 발달 등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착오송금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금융거래시스템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신 공포법령



주요 입법동향

0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65호, 2021. 1. 5., 일부개정]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제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는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5호, 2021. 1. 12., 일부개정]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발생 사실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및 여성가족부장관의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 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0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7.] [법률 제17912호, 2021. 1. 26., 일부개정]

최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상공인 등이 잘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홍보를 추가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입법동향



• 최근 입법예고 주요법령

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2021. 3. 4. ~ 2021. 4. 13.)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제74조제3항 단서에서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을 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제14조제1항)규정을 삭제하고, 「형법」에 낙태의 허용요건 규정(제270조의2)을 신설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국회에 제출된 법률개정안에 따라 「모자보건법」 및 「형법」이 개정되는 경우에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낙태를 한 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0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2021. 3. 12. ~ 2021. 4. 21.)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의 임차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7873호, 2021. 1. 5. 공포, 2021. 4. 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2021. 3. 19. ~ 2021. 4. 28.)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을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 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는 2년 이내 자격정지 하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며,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보육실태조사 공표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위반사실 공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며, 보육실태조사 공표방법을 정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또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을 단축(30일→10일)하여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의 중복 지급 문제를 감소하고자 함

최근 입법예고 주요법령



주요 입법동향

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2021. 3. 19. ~ 2021. 4. 28.)

하도급 제한을 5년 이내에 3회 위반한 경우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하도록 한 규정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를 추가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조성하는 한편, 긴급한 재해복구와 사고예방을 위해 개산계약(概算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 등 전염병 발생시 건설업 의무교육을 유예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0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2021. 3. 26. ~ 2021. 4. 15.)

현행 격리대상자의 격리기간을 자가 및 시설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최대장 복기로 규정하였던 것을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06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2021. 3. 31. ~ 2021. 5. 10.)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기타 예금보험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다른 자치단체 제개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시행 2021. 1. 7.]

|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와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교육감은 5년마다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 나.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다.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사항을 규정함 (제7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시행 2021. 3. 25.]

| 제안이유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의 자문,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와 환류·상임위원회 보고를 신설함(제6조)
- 나.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다.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를 신설함(제11조)
- 라.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함(제1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 15.]

| 제안이유 |

지방이양일괄법 시행(2021. 1. 1.)으로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3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법령 등 제도변경 교육
- 나.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방법 등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규정(제12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1. 2. 1.]

| 제안이유 |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울산광역시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제5조 및 제6조)
-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원 금액·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함
- 나. 환수 조치(제7조)
-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함



다른 자치단체 제개정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 3. 18.]

| 제안이유 |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등 현행 노동관계 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일자리 유형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가.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제6조 및 제7조)
- 나.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제8조)
- 다. 법률지원 및 기관·단체 지원(제9조 및 제10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 22.]

|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와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교육감은 5년마다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 나.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다.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사항을 규정함 (제7조)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1. 3. 16.]

| 제안이유 |

- 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학교교육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화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이러한 기술 발전과 사회변화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함
- 나.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나.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보급 및 미래교육 지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다.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시행 2021. 2. 4.]

| 제안이유 |

청년 실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10년 단위의 청년주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 나. 청년주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제6조)
- 다. 청년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7조)

의원 발언함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개최된 제67회 임시회와 제68회 임시회 회기 중 언급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통해 요즘 의정 단상을 들여다봤다.



김원식 의원

제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21.1.20)에서 조치원을 도시 침수 예방사업에 대해

과장님도 아시지만 조치원읍에 비만 내리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게 하루빨리 공사가 되어야지만, 지금 장마 때만 침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한 20분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도 침수되는 곳이 많아서 시기를 되도록 앞당겨서 침수되는 지역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노종용 의원

제6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21.3.18)에서 세종 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에서 복귀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바로 복귀가 안 되는 학생들이 참 많다 하더라고요. 부모하고의 갈등이 빨리 해소되면 좋은데 이게 거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어려울 때 이럴 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장기적으로 있어야 할 상황일 때 빨리 원 가정 복귀하는 게 목적이고 이게 가장 좋은 사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사회로 내몰려서, 거리로 내몰려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조례가 발의된 거고요.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5차 회의(21.2.18)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올린(Olin)공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요구하거나 어떤 연구개발 프로젝트나 이런 걸 아예 수행해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갖고서 아예 기업에 참여하세요. 저희는 아직 대학에 대한 그런 개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종시라면 충분히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가지고...결국에 대학 유치 그다음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세종시의 어떤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깐요.



박용희 의원

제67회 임시회 교육안전위 3차 회의(21.1.20)에서 야생 멧돼지 도심 출몰에 대해

빠른 시기에 이렇게 확산이, 확대되는 상황이라 작년에 아람동, 나성동, 대평동, 보람동, 종촌동 여러 지역에서 멧돼지 출몰이 있었는데 출몰이 될 때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로 인한 전염병도 유발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소방에 전적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언합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개최된 제67회 임시회와 제68회 임시회 회기 중 언급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통해 요즘 의정 단상을 들여다봤다.



상병헌 의원

제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 3차 회의(21.1.20)에서 가로수 관리 방안에 대해

이게 정말 우리 시의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그런 사업을 하실 때, 물론 LH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 시잖아요. 시민들한테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들이 안 생기고 현장에서 저희들도 불필요한 말들을 안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금택 의원

제6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 1차 회의(21.3.17)에서 공동활용 가능 연구개발장비에 대해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기계들이 과연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을까, 많은 국비를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만큼 활용되고 또 타 기업체에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을 분석해 가면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조례도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 것이지 사주기만 하고 아무런 점검 한번 안 한다면 안 하나만 못하다 이거예요.



손인수 의원

제67회 임시회 교육안전위 1차 회의(21.1.18)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 기준에 대해

우리 시에서 설치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 기준이 사실 법적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시청에도 많이 말씀은 드리겠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이런 시설물이 정확한 법에 나와 있는 근거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여기에서 안건으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현옥 의원

제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 3차 회의(21.1.20)에서 크린넷 유지·보수에 대해

크린넷 시스템 관련해서 세종시 이전에 먼저 크린넷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들이 향후 크린넷 시스템의 관로라든지 그런 것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지금 처리 비용이, A/S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의원 발언함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개최된 제67회 임시회와 제68회 임시회 회기 중 언급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통해 요즘 의정 단상을 들여다봤다.



안찬영 의원

제67회 임시회 교육안전위 3차 회의(21.1.20)에서 교량 결빙 구간에 대해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위험한 구간은 열선 같은 거를 도입했으면 어떨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서울에서 이번에 그 거를 해서 큰 호응을 얻으셨더라고요. 교량은 특히나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하고, 아침시간대나 저녁시간대 살짝 결빙이 났을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학내래교나 이런 도로들에 연계되어 있는 다리들이 직선 구간이 많기 때문에 속도도 좀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부 구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

제6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 2차 회의(21.1.19)에서 한글도시 사랑 도시 조성에 대해

한글 사랑 도시 세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공문서, 보도자료 등 공공 부문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업무 보고 자료에도 영어가 너무 많이 쓰여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들은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순열 의원

제67회 임시회 교육안전위 3차 회의(21.1.20)에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대해

‘과연 그런 속도제한의 효과가 정말로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시의 교통사고율이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제한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감속을 했다가 다른 데에서는 여지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속도를 내신다는 거지요. 운전자분들이. 조금 더 면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도로 안전에 있어서 속도제한 카메라가 주는 효과나 중앙분리대나 여러 가지 문제, 불라드나 규제봉 같은 거에 대한 안전을 주제로 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세 의원

제6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 2차 회의(21.3.18)에서 가출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해

이 아이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 청소년활동가랄지 이런 사람들이 늘 그 지역에서 그런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파악해야 할 그런 어떤 비공식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다.

의원 발언합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개최된 제67회 임시회와 제68회 임시회 회기 중 언급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통해 요즘 의정 단상을 들여다봤다.



이윤희 의원

제6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 1차 회의(21.1.18)에서 신도시 제2보건소 설치에 대해

보건의료원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했거든요. 거기 안에 입원 병상이 20개 정도 들어가면 신도시 내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평상시에는 만성질환 치료를 하고 혹은 재활치료 다 같이 진행되면서 혹시 코로나 상황에는 입원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타 시도에 도 이게 일부 있거든요.



이재현 의원

제6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 2차 회의(21.1.19)에서 농촌 지역 문화예술 향유에 대해

농촌에 있는 시민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한다고 해도 의미는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태환 의장

제67회 임시회 개회사(21.1.15)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민적 합의와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 공언하신 대로 새해에 국회 세종시대의 서막이 열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여야가 한뜻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혁신적 변화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제6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 1차 회의(21.03.17)에서 치유농업에 대해

앞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주요 선진국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것 있으면 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시민의 특성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발언합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개최된 제67회 임시회와 제68회 임시회 회기 중 언급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통해 요즘 의정 단상을 들여다봤다.



차성호 의원

제6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 2차 회의(21.1.19)에서 마을안길 등 도로 사용 방해행위에 대해

기존에 (도로) 포장돼 있는 데는 거기 해당되는 토지주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했다고 판단돼서 거기다가 덧씌우거나 포장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곳을 가지고 자기 사유재산을 주장하면서 해당 필지를 파헤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복안을 만드셔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재산을 목적으로 주장해 가지고 공적인 도로를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단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채평석 의원

제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 2차 회의(21.1.19)에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대해

통합 기본계획을 한다고 한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태어난 도시이기 때문에 같이 균형발전이 되어야지. 현재 금남면이나 연동면 같은 경우는 5생활권이나 대평동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먼 지역에서 보면 바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먼 지역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중앙일보

2021년 01월 26일
05면 (종합)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세종시의회 건의안 채택

세종시의회는 25일 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

의원 전원이 참여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차성호 의원 대표 발의)'은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 부여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독립성 보장 촉구를 골자로 한다.

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 결정 및 진행 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 부여에 대한 요구도 포함됐다.

이번 건의안은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위상 제고 방안 미흡과

지방의원 조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미비 등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국 지방자치회의 문제의식을 별도의 법률 제정 방안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및 국회사무처, 각 정당 대표와 전국 지방자치회에 발송할 계획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11.2*15.6)cm

▲ 2021.01.26_종합 05면 [중앙일보]

충청신문

2021년 01월 14일
03면 (종합)

"행정수도 완성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세종시의회, 비대면 브리핑... 내일부터 67회 임시회 돌입

세종시의회가 올 한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계적 목표 실현을 위해 총력을 펼친다.

이태환 의장은 13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올 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안 수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계적 목표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의 권한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지방자치의 새 시대에 걸 맞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내실 있는 의정활동 프로그램 마련하는 데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권과 관련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오는 2월까지 우수 평가를 받은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 구성을 통한 자문, 윤리특위 논의 등을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민에게 신뢰받고 열심히 일 할라는 의의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67회 임시회에 돌입, 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정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19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3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서금택, 상병현, 채병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집행부의 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2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 박윤재, 차성호, 유철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태환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의 다짐들인 조례를 효율적으로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실현해 낼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규모 기자 in13031303@dailycn.net
(11.1*13.1)cm

▲ 2021.01.14_종합 03면 [충청신문]

大田日報

2021년 02월 01일
16면 (인물)

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위촉



세종시의회는 지난 29일 대회의실에서 제1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사진>

이날 자문위 위원으로 △고려대학교 김정학 교수 △대전지방변호사회 조재희 변호사와 조진영 변호사 △세종시출입기자단 최선중 기자(대전KBS)와 신석우 기자(대전CBS)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과 세종시 새마을부녀회 엄미숙 회장이 각각 학계와 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됐다.

천재상 기자
(7.7*11.2)cm

▲ 2021.02.01_인물 16면 [대전일보]

쓰레기를 어찌 하오리까...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이다.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나의 중요한 임무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오롯이 남편인 나의 몫이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파트 단지는 음식물, 비닐, 종이, 고철, 플라스틱 등으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 것 같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중국 청도에서 생활했었는데, 음식물, 플라스틱, 비닐 등을 구분 없이 한 쓰레기통으로 시원하게 넣어버리던 대륙식에 비하면,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는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의 현실을 좀 더 간간히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많다. 예를 들어 보자.

첫째, 깔끔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종이 박스의 비닐 테이프를 제거하고 버리는 경우를 거의 못 봤다. 접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라서 마대자루가 쉽게 차버리고, 주말이 끝난 월요일은 쓰레기 동산이 돼버린다. 비닐봉지에 음식물이 심하게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 스티로폼이 아닌 것을 스티로폼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스티로폼도 박스 그대로 버리니, 관리자분이 일일이 부러뜨려야 한다. 그리고 분리수거 대상이 아닌 품목들이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지 않고 분리수거함에 놓여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둘째, 쓰레기 양이 너무 많다.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일회용 물품과 비닐 봉지 문화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음식의 양이 늘었고, 택배 물품의 증가 또한 쓰레기 폭증을 이끌고 있다. 이 문제는 현대 생활패턴과 관련된 문제라 고치기도 힘들다.

셋째, 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하루에 1~2건은 이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멀쩡한 가구와 살림살이 등이 버려진다. 특히 책상이나 가구는 별달리 이상이 없는데도 버려진 물건이 많다. 아마도 새집으로 이사 가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산뜻한 새 가구를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환경

보호론자인 나로서는 정말 안타깝다. 아파트 앞 자전거 보관소의 자전거 중 대략 5~60%는 그냥 방치돼 있다. 외관이 멀쩡한데도 체인은 녹슬고, 열쇠는 채워져 있으니, 처리하기도 난감하다. 방치된 자전거는 밖을 돌아다녀 봐도 자주 눈에 띈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면 어떤 모습일까?
영화에서 봤던 핵폭탄이 오가는 전쟁이나
혹성 충돌일까?
나는 쓰레기가 주범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땅을 파보면 비닐봉지와 플라스틱이 나오고, 물은 오



염되어 마실 수가 없고, 공기는 미세먼지와 독가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극단적 공상일 수 있으나, 현재 인류가 직면한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다. 몇 년 전 환경업체의 쓰레기 수거 거부로 인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성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세종시, 대한민국, 지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땅임을 명심해야 한다. 집과 돈을 물려주겠다는 현실적 목표도 좋지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겠다는 고상한 목표도 갖자. 그리고 자라고 있는 학생들의 환경보호의식 함양도 중요하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직접 해보고,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시설 등의 견학, 가정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으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깨우쳐야 한다.

쓰레기 문제는 나만 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일등국민, 문화시민이 되자!

(세종시 달빛로211)
손우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2021년 2분기 세종시의회 회기 안내

2021 **05** M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1 **06** Ju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69회 정례회(35일간)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 기본일정은 의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의사기록담당 300-7272

■ 본회의 ■ 회기운영

세종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독자 투고 안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식지 <세중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점, 의회에 바라는 글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 증명사진 및 관련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 (담당자 박천국)

| 전화 | 044.300.7248 | 팩스 | 044.300.7219 | 이메일 | havnpark@korea.kr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방송 보러가기 counciltv.sejong.go.kr

+ 입법정보

세중의회소식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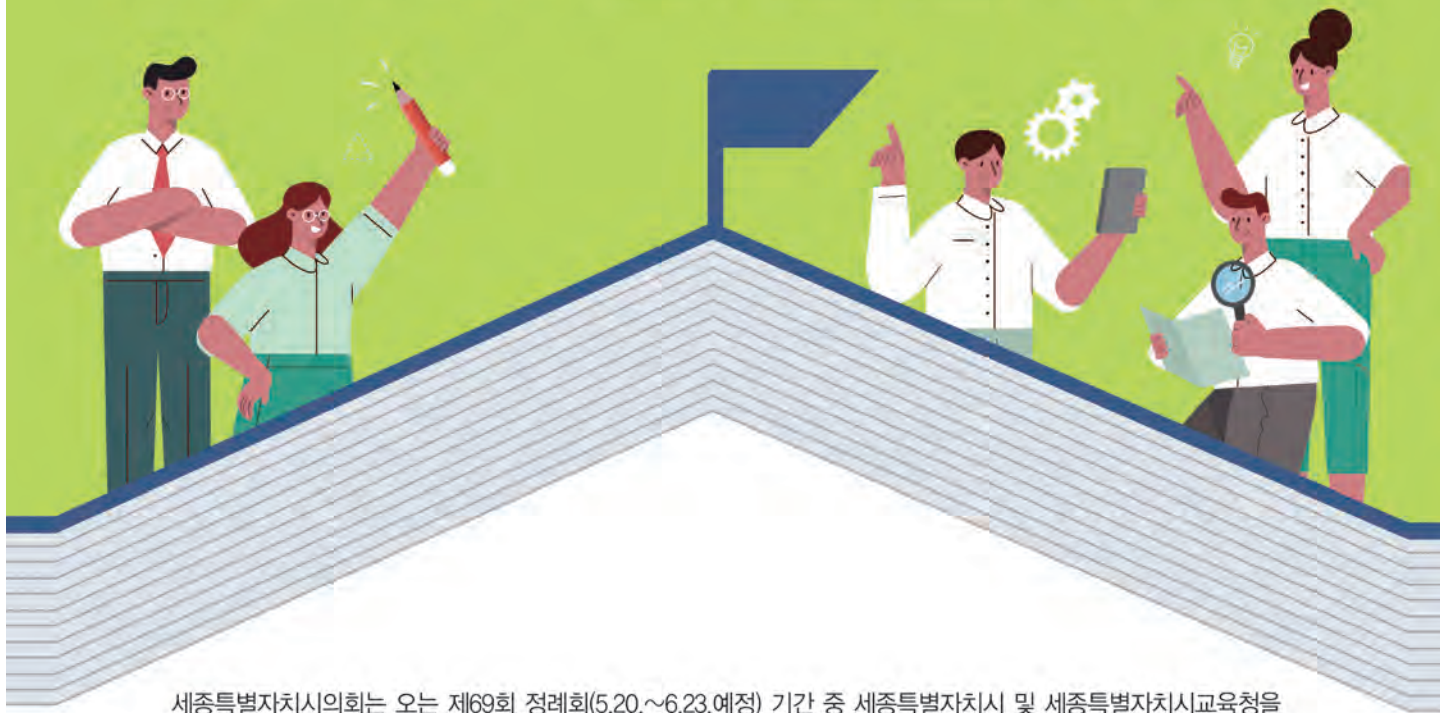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홍보기획담당)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전화 044-300-7000

홈페이지 <http://council.sejong.go.kr>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제69회 정례회(5.20.~6.23.예정) 기간 중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보기간 : 연중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보 건은 익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

● 제보내용

-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 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 불편사항 등

제외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근거없는 비방 및 악의적인 루머
-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 제보방법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ejong.go.kr>)
- 소통과 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방문 및 우편, 팩스(044-300-7219)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 담당관실 의사기록담당
- 신청서식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 > 의회소식 > 공지사항

※ 문의 : 044-300-7272

● 기 타

- 제보자의 제보내용, 인적사항 등은 비공개하지만, 공개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